Contents

2019년 겨울호

◉ 기획논단

▸▸▸ 논고 1 :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과 2020년 주요정세 전망 / 남성욱 ·· 3

▸▸▸ 논고 2 : 김정은시대 금융산업 발전현황과 미래 / 최 문 ····· 26

▸▸▸ 논고 3 : 신한반도체제 구현을 위한 평화경제 단계별 추진전략 / 정유석 ····· 51

◉ 남북협력기금 통계

▸▸▸ 남북협력기금 통계 ····· 80

기획논단

- 논고 1 :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과 2020년 주요정세 전망
- 논고 2 : 김정은시대 금융산업 발전현황과 미래
- 논고 3 : 신한반도체제 구현을 위한 평화경제 단계별 추진전략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과 2020년 주요정세 전망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2019년 북미관계와 북중관계 동학 분석
Ⅲ. 2019년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역학 분석
Ⅳ. 2020년 동북아 국제정치와 이슈별 전망
Ⅴ. 결 론

〈요 약〉

2019년 한반도 국제정세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사자성어로 압축된다. 다사(多事)는 '높은 기대(high expectation)'로 시작했으나 '낮은 성과(low result)'로 종료되었다. 남북관계를 시작으로 북미, 한미, 한일 및 한중 등 주변 국제관계 중에서 어느 한 곳도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했다. 일부 사안은 내부 변수로, 다른 사안은 외부의 충격으로 기대만큼 국제환경이 녹록치 않았다. 다양한 독립과 종속변수만을 가지고 2020년 한반도 정세 분석에 계량분석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선책으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2020년을 전망할 경우 4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된다. 첫째, '최상의 시나리오(The Best scenario)'다. 둘째,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The Muddle through scenario)'다. 셋째, '지지부진 시나리오(The Slow scenario)'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The Worst scenario)'다. 2020년 비핵화 시나리오는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가 소진되면서 주기적으로 지지부진 시나리오가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다만, 사태 악화에 따른 북미 양측의 부담으로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는 북미 간 기본 구도로 작용할 것이다. 2020년 한반도 정세는 갈 길은 먼데 거센 비바람과 천둥 벼락을 동반하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의 한해가 될 것이다.

I. 문제 제기

2019년 한반도 국제정세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사자성어로 압축된다. 다사(多事)는 '높은 기대(high expectation)'로 시작했으나 '낮은 성과(low result)'로 종료되었다. 남북관계를 시작으로 북미, 한미, 한일 및 한중 등 주변 국제관계 중에서 어느 한 곳도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했다. 일부 사안은 내부 변수로 다른 사안은 외부의 충격으로 기대만큼 국제환경이 녹록치 않았다.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흥분과 여운 그리고 남북한 간 9·19 평양선언 등으로 2019년 기해년은 희망과 기대로 서막이 올랐다. 새해 들어 두 번째 절기로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2월 19일 우수(雨水) 까지는 봄바람의 훈풍이 불었다. 비건 미국의 대북 특사가 2월 9일 57시간의 평양 실무협상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했을 때도 기대가 높았다. 이에 앞서 1월 중순 스웨덴에서 비건 대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2박 3일 협상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건의 평양 협상을 '매우 생산적인 만남(very productive)'이라며 하노이에서 2월 27일과 28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본인의 의도대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하노이 회담을 기대해도 좋다는 의미인지 오리무중이었다. 1차 회담 직전 판문점에서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7차례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들이 덜컥 만난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문은 부실 자체였다. 실무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최고 지도자 간 만남에서도 합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학습한 교훈일 것이다. 현장 협상에서

자식 또래인 김정은 위원장을 '어르고 달래서' 본인의 의도대로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2차 회담의 결과도 불투명해 질 것이 분명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대통령 주변의 브레인들을 제치고 트럼프 대통령을 유혹하여 자신들의 협상안에 서명하게 하면 성공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면 이 역시 미국 국내정책 결정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

정상회담(summit)은 사실 9할이 의전(ceremony)이고 현장의 임기응변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안 초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허풍이 아니라면 북미간에 제한적인 '스몰딜(small deal)'이 구체화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시되었다. 당시 상황을 '건설적인 지점'이라고 표현한 비건 대표의 발언은 양측이 비핵화 주제와 제재해제라는 양측의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방향에 있어 일단 합의했다는 의미로 평가되었다. 북한이 제시한 안건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의 비핵화 조치다. 반면 미국이 제시한 당근은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은 미디어를 위한 리얼리티 쇼(Reality Show)와 같이 노딜(No deal)로 막을 내렸다.

2019년 동북아 국제정세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을 시작으로 6월이 1차 국면 전환의 분기점이었다. 6월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평양을 국빈 방문하였다.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평양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순간이었다. 6월 28일 오사카 G20 정상회담과 6월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트위터 만남이 성사되기 직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천군만마를 얻는 사건이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이 급증하였다. 특히 10월초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결렬되면서 향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선전전이 지속되었다. 중국의 강력한 후원과 지지를 확보한 북한은 대남 비난을 시작으로 '연말시한'을 내세우며 워싱턴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였다. 10월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백마 등정 이후에는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함께 대미 강경론과 이에 따른 미국의 반사적 대응이 충돌하였다. 2020년 한반도 정세는 평양의 만조기(滿朝期) 공세 전략과 함께 미국의 대선이 맞물리면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I. 2019년 북미관계와 북중관계 동학(動學) 분석

1. 북미관계 분석 : 하노이 회담의 결렬

두 명의 관습적이지 않은(unconventional) 지도자가 만났던 첫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산(miscalculation)이었다면 두 번째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오판(misjudgement)이었다. 세기적인 만남을 리얼리티 쇼로 종결하기에는 세간의 기대감이 높았다. 기대와 열망을 담아서 증권가 사설정보지에서는 사전에 가상 합의문 초안까지 유포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미 간 세기적인 핵협상 타결에 대비해 광화문에서 3월 1일 삼일절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 축하 이벤트까지 준비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66시간 장거리 기차투어는 연일 뉴스를 만들어냈다.

전 세계의 이목은 2월말 하노이로 집중되었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박 2일의 일정의 둘째 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You are not ready for the agreement)"고 발언하며 전용기에 올랐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노딜(No deal)이 베드딜(Bad deal)보다 좋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양측 간에 진실게임이 전개되었다. 사달이 난 핵심은 두 가지다. 비핵화의 범위와 대북제재 해제 여부였으며, 특히 해제의 범위를 둘러싸고 북미 양측 간에 '네 탓 공방'이 치열하였다. 협상 결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사안이다. 양측은 회담이 틀어진 당일 심야에 반박과 재반박의 격렬한 대언론 심리전을 전개했던 주제도 북한이 요구한 대북제재 해제의 범위였다. 어느 쪽에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고, 우리는 북한 핵시설 큰 부분에 대한 폐기를 원했다. 우리가 대북제재를 해제해줄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리용호 외무상은 "우리는 실현 가능한 제안을 했다"며 "모든 제재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고, 부분적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협상 결렬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모든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다(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3월 1일 필리핀에 도착하여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한 것은 무기에 대한 제재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재에 대한 해제였다며 북한의 '일부 해제 요구' 주장을 '말장난(I think they're parsing words)'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제재의 범위를 둘러싼 전면과 부분의 공방이 우선 '말장난'인지 속사정을 파악해보자. 지난 2월 28일 북한의 심야 기자회견은 역설적으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인민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무기 증강보다도 우선 제재를 해제시켜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집권 10년을 기약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시절 마트에 가득한 물자를 보다가 평양 백화점의 빈약한 진열대를 보고 왜 조국은 이렇게 가난한가라는 한탄과 한숨은 청소년 시절 김정은을 지켜본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양이 직면한 빈곤과 가난의 원인 중의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사실을 김정은은 집권 8년 만에 파악하였다.[1)]

북한이 언급한 2016~2017년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는 새롭게 채택될 때마다 '역대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강도를 더해왔다. 북한 경제는 일련의 제재결의로 상당한 '내상'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1) 남성욱, "하향세를 거듭하는 북한경제," 『월간 북한』 2019년 12월호.

그동안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위주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채택돼 왔으며, 제재 대상을 넓히고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다. 그물망이 촘촘해짐으로써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대가로서 안보(security) 우려보다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제재해제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기에 이르렀다. 유엔 대북제재는 괌에서 이륙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자산보다도 훨씬 평양 지도부를 아프게 압박하였다. 2016년 이전 제재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 조달을 차단하는 '직접제재'였다. 하지만 4차 핵실험 이후 2270호를 기점으로 돈줄을 잡아 경제를 옥죄는 방식의 '간접제재'에 집중되었다. 역시 효과는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간접제재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2] 하노이 회담은 간접제재의 성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실 이전에 북미간 회담에서 북한은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등과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안보상 우려 해소가 우선이었다. 하지만 제재로 먹고사는 민생은 물론 평양의 궁정경제(court economy)조차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핵개발의 성지(聖地)인 영변만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핵의 가치는 북한 전체 핵의 50% 수준으로 보았고 분강, 강선 등 5곳에 대한 추가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야만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3]

결국 양측의 거래 명세서 목록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주기적인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2) 정한범, "미국 주도 대북제재에 대한 이론적 효과성," 『평화학연구』, 제18권 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7 참조.
3) 남성욱, "대북 경제제재의 향배와 북한의 선택," 『월간중앙』, 2019년 12월호 참조.

트위터를 각각의 수단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4월 이후 연말 시한을 내세우며 도발을 이어가다가 연말을 맞이하여 임계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들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 최선희 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늙다리 망령'이라는 과거지향적인 비난 담화를 냈다. 북한은 12월 들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다. 연말 데드라인을 앞두고 백두산의 김정은 백마 등정 사진을 내보내더니 물리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현안을 논의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대통령이 자랑할 거리를 안겨주었으나 …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란 배신감 하나뿐"(11월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11월 18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등 최근 북한의 연속되는 대미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만 이익을 보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12월 하순 예정된 북한의 주요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미국에 경고해온 '새로운 길'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 2019년 일련의 남·북·미 관계는 새삼 위기 → 협상 → 합의 →결렬이라는 지난 26년간의 북핵 협상이 매우 지난한 과제임을 절감한다.

2. 북중관계 분석 : 혈맹관계 복원

2011년 12월 집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정책 핵심 목표는 북중

외교관계 정상화였다. 고모부 장성택 등을 제거하고 내부 권력을 공고하게 다진 김정은 위원장은 1차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지도자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시진핑 주석을 평양에 초청하여 혈맹의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4] 기회는 위기 속에서 포착되었다. 2016년 1월 4차, 2016년 9월 5차,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고립무원의 북한의 손을 잡은 국가는 역설적으로 중국이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양국은 3월 1차 정상회담, 5월 2차, 6월 3차, 2019년 1월 4차 회담에 이어서 드디어 5차 북중 정상회담(6.21~22)을 평양에서 개최함으로써 전통적인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전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바타(Avatars) 역할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적극 지원하였다.

양측의 이해관계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면서 명확하게 부합되었다. 2019년 6월 G20 오사카 정상회담과 3차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계속해서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며 공개적인 대북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응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 계속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 진전을 거두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라며 북중 협력을 재차 강조하였다.

4) 한관수, "북중관계의 지속과 변화," 『통일전략』, 제17권 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7 참조.

결국 북핵 카드는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고립시켰으나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북중관계 회복의 마중물로 사용되었다. 2020년 한반도에는 북중 혈맹과 대응하는 미일동맹, 제3자 관점으로 변모하는 한미동맹의 역학관계가 시기별로 요동칠 것이다.

Ⅲ. 2019년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역학(力學) 분석 : 대립과 갈등

1. 남북관계 : 기대에서 실망으로

2019년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변수였다. 2019년 남북관계는 '예측불허'라는 단어로 정리된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남북관계는 급변했다. 평화롭다가도 북한이 쏘아올린 13차례의 미사일과 방사포 화염에 주기적으로 관계가 경색됐다.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는 중간 중간 '깜짝 만남'으로 반전됐다. 2019년 남북관계는 다양한 변곡점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북미관계의 답보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 북미 대화의 결과물이었다. 남과 북은 군사 실무접촉, 도로협력 실무접촉 등을 지속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행사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북미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연쇄적으로 남북관계도 경색됐다. 북한은 2019년 3월 22일 남북 간 연락과 민간 교류를 위해 설치됐던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북한 상주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3일 뒤 인력 일부를 복귀시켰지만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북한은 함께 진행해오던 남북 유해발굴사업 등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도 불참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첫 미사일 도발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가 이어졌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였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같은 달 16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며 "다시는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금강산을 시찰하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기도 했다. 2019년 10월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남북 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3차전 경기가 열렸지만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다.

2019년 하반기 남북관계의 추락은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개인 비난으로 이어졌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마라"(2019.4),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5],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과 같은 인신 공격적이며 비외교적인 표현을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선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아냥하였다. 또한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5)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8월 16일 대변인 명의 담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역역하다"고 힐난하였다. 북한의 남한 대통령 개인 비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북한은 과거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을 때마다 역대 보수정부의 대통령들을 비난하였다. 하지만 진보정부의 대통령에 대해 보수정부에서도 듣기 어려웠던 비속어와 욕설을 담은 비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개인 비난의 배경은 두 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평양에서 15만 명의 군중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도록 허용하는 등 북한 나름대로 공을 들였으나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는 불만의 표출이다. 사회주의에서 배신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보복 심리의 발동이다. 사회주의에서 적과 동지의 구분은 매우 분명하다. 다음은 북중 동맹 강화로 효용가치가 떨어진 남한 무시 전략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지원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금강산 관광을 대체할 수 있고 100만 톤의 식량 지원으로 남한의 5만 톤 지원은 조족지혈 수준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개인 비난은 임기 말까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이다.

2. 한일관계 :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파기

한일관계 역시 일본의 수출금지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대응 등으로 1965년 국교 수교 이후 어떤 고비보다도 어려웠다. 한국은 일본의 무역 분쟁 도발에 대해 안보 카드로 대응하였다. 청와대가 2019년 8월 22일 파기하겠다고 발표한 지소미아는 11월 22일이 종료

시한이었다.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시해 온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全)방위로 높인 것은 협정 자체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협력의 프레임이 와해되는 전초 사안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월 26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전 보장에 매우 이롭다"며 "지소미아로 돌아올 것을 한국에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과제가 안보 과제로 파급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지난 7월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이 8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로 이어진 데 대해 근본적 회의감을 나타내었다. 그에 앞서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10월 25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 서울의 외교당국자는 지소미아 문제가 워싱턴의 최우선 관심사이기 때문에 미국이 앞장서서 일본을 제지할 것이라는 단순논리를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미일동맹은 한미동맹보다 한 수 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아베 총리와 주고받을 것이 훨씬 많았다. 워싱턴의 친일 로비스트의 파워는 친한 로비스트 파워보다 10배 이상이라는 현실을 간과하였다.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이후 사태는 한국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일본의 대(對)워싱턴 로비력을 과소평가한 결과다. 한국은 1905년 일본의 한국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상호 승인하는 가쓰라-태프트 협약의 끈끈한 역사적 전통을 망각하였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한일 양국의 균열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결국 미국의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와 서울과 도쿄에서 확산된

한일관계 복원의 필요성 등이 맞물리며 사태는 겨우 봉합되었다. 한일관계는 과거에도 어려웠고 현재도 어렵지만 미래에도 양측의 견해차가 적지 않아 합의점 도출과 이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2020년 2차 수출금지 조치 등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3. 돈이 중요하다(Money does matter) : 한미 방위비 협상

"돈이 중요하다(Money does matter)"는 명제로 무장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만드는 것도 버리는 것도 식은 죽 먹기라고 인식한다. 그에게 세상은 돈이 되는가와 안 되는가의 이분법으로만 이해된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의 강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애초 무관심 대상이다. 카지노 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트럼프 대통령은 '뉴노말(new normal)'을 내세우며 돈 드는 기존 가치(value)들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다. 여기에 유감스럽게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금도 포함되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개하는 전략자산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을 망라해 한국 방위에 쓰는 돈이 연간 48억 달러(약 5조 7400억 원)라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그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 114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는 비외교적인 발언을 하였다.[6)]

6) 남성욱,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가전략』 2019년 11월호 참조.

한국 정부의 일차적인 대응 실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해 기존 5년간의 다년 계약 대신에 1년 계약에 서명한 점이다. 지난 3월 한미는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다. 대통령직을 맡기 전에 단 하루도 공직을 맡아 본 적이 없는 기업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와 사고를 면밀하게 연구하지 않은 정부 당국자들이 단기적 득실에 집착하여 기존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1년 계약에 서명하였다. 1991년 1차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이후 처음으로 다년 계약이 아닌 1년짜리 계약이 체결되어 정부는 해마다 미국의 인상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이미 예견되었다. 미국은 당초 50% 인상 요구에서는 물러섰지만 해마다 협상을 통해 한국측 부담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50% 인상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5년 계약을 포기하고 1년 계약에 합의했다. 한국은 목표치였던 1조원은 넘어섰지만 미국이 주장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국 요구액인 10억 달러를 방어하였다. 지난 22년간 주한미군이 대규모 감축됐던 2005년을 제외하고 매 협상 때마다 총액이 증가됐다. 결론적으로 5년 계약의 50% 인상안을 수용하는 것이 차선의 해답이었다. 매년 협상할 때 마다 양측의 숫자 싸움과 신경전으로 동맹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는 유권자를 상대할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언급하였다. 유형의 단기 이득을 방어하려다 무형의 장기 손실이 적지 않은 시나리오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양날의 검이다. 가치 대신에 비즈니스 거래의 '아파트 동맹(condominium alliance)'을 내세우는 트럼프에게 한국의 분담금 인상 불가 방침은 한미관계를 예측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2019년 가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미군 철수를 선언했다. 그는 트위터에 "돈 많이 썼다"며 쿠르드족을 배신했다. 쿠르드족은 시리아에 근거를 둔 극단적 테러조직 IS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의 성공을 도운 주인공이다. 쿠르드족은 미군 지원으로 1만 1천여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나 미군의 철군으로 터키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결정하면서 동맹인 쿠르드족을 '토사구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같은 다른 동맹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미국의 일명 '쿠르드 철군'은 혈맹도 미국을 믿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과 함께 이스라엘은 "칼은 등 뒤에 있다"며 지지 철회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7] 반대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반미 여론이 고조될 수 있다. 트럼프의 결정은 동맹국에게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또한 북한에게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 향후 한반도 정세에서 실리적 계산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정치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지만 열강에 끼인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 그나마 돈 계산하는 동맹이라도 있는 것은 차선의 비책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혈맹도 돈을 따지는 시대다. 국익을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야 한다.[8]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과 수용하는 기준은 명분이 아니고 실리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명분을 중시한다. 한국 대표는 방위비 협상장에서 한국이 1년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대표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액수는 수십 배에 달한다고 반박하였다. 21세기

7) New York Times, 11 October, 2019.
8) 남성욱, 『한국의 외교안보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년 참조.

정글과 같은 국제정치 시대에는 현안에 탄력적인 적응이 불가피하다.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부분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핵잠수함 건조 및 미사일 사거리 확대 등 한미 간에 안보 숙원 과제를 얻어내는 '주고받기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 2020년 한미관계는 방위비와 지소미아 등 현안을 극복하고 보다 생산적인 협력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미국은 주변 어떤 국가보다 한국에게 '덜 나쁜 국가(less bad country)'이기 때문이다.

Ⅳ. 2020년 동북아 국제정치와 이슈별 전망

1. 긴장으로 시작하는 2020년 한반도

북한이 연말을 맞이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2020년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다. 2020년은 한국의 4월 총선, 미국의 11월 대선, 북한의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 등의 정치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월 1일 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북미협상 중단 선언 등 대미 투쟁 전략을 공개할 것이다. 연말을 지나 새해를 맞이하지만 북미 간의 극적인 타결 전망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3차례 이상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의 카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상대방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만남은 역설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공이 상대방 코트에 있으며 워싱턴

이나 평양에서 새로운 카드가 제시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상대방을 강요하는 '압박외교(pressure diplomacy)'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선 선거운동에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은 상반기 중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등의 북한 도발을 억지하기 위하여 최후의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020년 북미관계는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 종착지를 손쉽게 예측할 수 없다. 지난 1994년 상반기 1차 북핵 위기 당시의 로드맵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9] 군사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극적으로 외교적인 해법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제네바 합의에 도달한 위기와 협상과 합의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연출될지,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전망은 용이하지 않다. 2020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는 다양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잠복해있다.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북미관계에 의존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 비난은 지속될 것이며 북중 관계 복원을 바탕으로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남한을 압박할 것이다. 적을 향한 관점이 불일치하고 '돈 문제'로 이견을 노출하는 한미관계는 2020년 갈등과 봉합 및 협력이라는 구도가 불규칙하게 작동할 것이다. 한중 관계는 상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사드문제로 촉발된 갈등을 일정 부분 완화시킬 것이다. 중국이 안보측면에서 한미관계를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한다면 한미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안별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9) 박용수, "제1차 북핵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관리유형," 『국제정치논총』, 제55권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5 참조.

2. 시나리오 전망과 분석

다양한 독립과 종속변수만을 가지고 2020년 한반도 정세 분석에 계량분석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선책으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2020년을 전망할 경우 4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된다.

첫째, '최상의 시나리오(The Best scenario)'다. 북미 간에 진정성 있는 빅딜에 의한 전면적 비핵화와 전면적 제재완화 합의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귀결되는 긍정적 시나리오다. 궁극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1단계 영변에 대한 비핵화를 완료하면서 2단계로 분강, 강선 등 2단계 비핵화에 진입한다. 2020년 상반기 4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면적인 빅딜과 착한 비핵화 이행이 핵심이다. 둘째,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The Muddle through scenario)'다. 양측이 부분 타결을 주장하며 상호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사태를 악화시키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점차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며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선언한다. 북미 협상 중단도 포함된다. 하지만 군사적 도발 행동은 자제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핵무기가 여전히 존재한다. 미래의 핵무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여전히 작동된다. 4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완의 회담으로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된 핵무기의 비핵화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다. 양측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명분 확보 차원에서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상호 신상 비난은 절제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도출

되지 않으며 사태는 변화에 직면한다. 우선 당장의 전쟁 위기는 사라졌으나 '불완전한 비핵화'로 '불안한 평화(unstable peace)'가 지속된다.

셋째, '지지부진 시나리오(The Slow scenario)'다.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의한 장거리미사일 도발로 사태가 악화된다, 4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논의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간은 누구 편인가? 북한은 파키스탄 핵개발과 보유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비핵화 의제를 북미 간 협상에서 배제시키려 한다. 북미 간의 갈등이 표출되며 비핵화 외교협상보다는 행동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강경 대응 시나리오가 논의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The Worst scenario)'다.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안보상황으로 회귀하는 '비포 평창(Before Pyoungchang)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발동하며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1994년 3월에서 5월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2020년 비핵화 시나리오는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가 소진되면서 주기적으로 지지부진 시나리오가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다만 사태 악화에 따른 북미 양측의 부담으로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는 북미 간 기본 구도로 작용할 것이다.

Ⅴ. 결 론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2020년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요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국제정치 이론은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세 가지 정도가 거론된다. 우선 미치광이 이론이다. 아써 술레진저(Arthur M. Schlesinger Jr, 1917~2007)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1969년 월맹 북폭을 감행한 것을 미치광이 이론(狂人理論, Madman theory)으로 설명한 바 있다.[10] 다음은 예측불가능 이론(Unpredictable Theory)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예측 불가(unpredictable)한 나라가 돼야 한다. 나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언급한데서 비롯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이론이다. 기존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을 토대로 하되 보다 공격적으로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존 미어세이머(John Mearsheimer) 시카고대 교수는 2004년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에서 굴기하는 중국에 대응해서 공세적으로 힘의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미국의 경성 및 연성파워를 총동원하여 동맹은 물론 중국 등의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 저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12]

북핵 문제는 미중관계의 배경 속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에 좌우되며 미국과 북한 간의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적대관계를 토대로 협상을 이어가는 복잡 미묘한 과제다. 북핵은 북한 정권의 생존문제이며

10) 네이슨 밀러 지음 김형곤 옮김, 『이런 대통령 뽑지 마세요-미국 최악의 대통령 10인』, 서울: 혜안, 2002 참조.
11) 존 미어샤이머 지음, 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김앤김북스, 2017 참조.
12) Nam, sung-wook, 『North Korean Nuclear Weapon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ingapore: World Scientific, November 2019.

북핵의 공인은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의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것이다.[13] 문제 해결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뉴욕 양키스 포수 요기베라는 명언을 남겼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until it's over)〉 2020년 한반도 정세는 갈 길은 먼데 거센 비바람과 천둥 벼락을 동반하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의 한해가 될 것이다. 한국민 모두 국제정치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천하의 흥망은 필부(匹夫)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명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참고문헌]

남성욱, "대북 경제제재의 향배와 북한의 선택", 『월간중앙』 2019년 12월호 서울: 중앙일보사 미디어, 2019.

_____, "하향세를 거듭하는 북한경제", 『월간 북한』 2019년 12월호 서울: 북한연구소, 2019.

_____,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가전략』 2019년 11월호, 경기: 세종연구소, 2019.

남성욱 외, 『한국의 외교 안보와 통일 70년』,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슨 밀러 지음 김형곤 옮김, 『이런 대통령 뽑지 마세요-미국 최악의 대통령 10인』, 서울: 혜안, 2002.

박용수, "제1차 북핵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관리 유형," 『국제정치논총』, 제55권 4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5.

13) Nam, sung-wook, Research on Contingency and Determinants of Stabilization Strategy in North Korea, KINU,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정한범, “미국 주도 대북제재에 대한 이론적 효과성,”『평화학연구』, 제18권 3호, 서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7.

존 미어샤이머 지음, 이춘근 역,『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김앤김 북스, 2017.

한관수, “북중관계의 지속과 변화,”『통일전략』, 제17권 2호, 한국통일전략 학회, 2017.

Nam, sung-wook, Research on Contingency and Determinants of Stabilization Strategy in North Korea, KINU,『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_____,『North Korean Nuclear Weapon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ingapore: World Scientific, November 2019.

『New York Times』

김정은시대 금융산업 발전현황과 미래

최 문 (연변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김정은시대 전자결제카드의 출현과 이용
Ⅲ. 김정은시대 상업은행의 출현과 발전
Ⅳ. 김정은시대 전자상거래의 출현과 발전
Ⅴ. 금융산업의 미래

〈요 약〉

김정은시대에 들어선 후, 금융산업에 있어서 북측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금융결제에 있어서 무역은행은 2013년에 전자결제카드인 〈나래〉를 발행하여, 국내 외화봉사단위들의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전성〉카드와 〈금길〉카드도 연이어 발행되어, 북측에서의 화폐유통과 자금회전속도를 가속화하였다. 다음은 은행업에 있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4년부터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하고, 상업은행의 시범적 개혁을 실행하였으며, 개혁의 성공과 더불어 현재 북측에서는 30~40개의 상업은행이 활발한 예금과 대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인민봉사총국에서 2015년 정초부터 국가컴퓨터망과 전자결제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점인 〈옥류〉를 운영하였으며, 뒤이어 〈상연〉, 〈만물상〉, 〈내나라〉, 〈광흥〉, 〈은파산〉, 〈앞날〉 등 많은 전자상거래기업들이 설립되어, 상품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상품유통을 가속화 하였으며, 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였다. 향후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북측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사업방법의 개선이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아울러 금융발전동향에 더욱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2018년 4월 20일, 북측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3 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전당·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1년여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무려 5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지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도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는 긴장완화의 국면이 조성되었으며, 심지어 한반도 비핵화문제 해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제사회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해제도 많은 전제조건과 어려움을 동반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제재의 완화 등 문제해결에 있어서 상황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 이러한 주변 환경변화 및 상황개선과 더불어 북측에서의 경제발전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거시적인 경제연구보다도 구체적으로 각 산업부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목적하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김정은시대 북측에서의 금융산업의 발전현황과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선 후, 금융산업에 있어서 북측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금융결제에 있어서 무역은행은 2013년에 전자결제

카드인 〈나래〉를 발행하여, 국내 외화봉사단위들에서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후 중앙은행에서 〈전성〉카드를, 대성은행에서 〈금길〉카드를 연이어 발행하였다. 다음은 은행업에 있어서 2014년부터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하고, 상업은행의 시범적 개혁을 실행하였으며, 개혁의 성공과 더불어 현재 북측에서는 30~40개의 상업은행이 활발한 예금과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인민봉사총국에서 2015년 정초부터 국가컴퓨터망과 전자결제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점인 〈옥류〉를 운영하였으며, 뒤이어 〈상연〉, 〈만물상〉, 〈내나라〉, 〈광흥〉, 〈은파산〉, 〈앞날〉 등 많은 전자상점들이 설립되었다.

김영남은 "〈나래카드〉, 현금카드와 같은 신용카드를 많이 개발하여 리용하는 것은 유통중 화폐량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봉사를 받는 불합리성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은행에 많은 자금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한다"[1]고 주장하고 있으며, 장영란은 "상업기업소들에서는 대금결제사업을 개선하여야 하는바, 이는 류동자금의 회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대금결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보다 합리적인 결제방법, 특히 전자결제방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전자결제방법은 상업기업소와 생산기업소, 은행 등 연관단위들 사이의 전자자료 교환체계 등 전자정보체계의 수립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결제방법으로서 그것은 류동자금이 결제과정에 머무르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이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결제방법이다. 전자결제방법의 적용은 시대의 요구이며 그 우월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크게

1) 김영남, "유휴화폐자금동원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4년 제2호, p.73.

발휘되고 있다"[2]고 설명하고 있다.

안승진은 "통일적인 환률관리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우선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는 방향에서 조직·진행해 나가야 하며, 중앙은행은 주기적으로 다른 은행들과의 외화의 사고팔기 시세를 발표하여, 은행들이 그것을 외화교환거래에서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다른 은행들에 통일적인 외화교환업무세칙을 내려 보내어, 이 사업이 나라의 화폐유통 공고화에 이바지하도록 조직·진행하여야 한다"[3]고 지적하고 있다.

고금혁은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 하여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은 날을 따라 늘어나는 자금적 수요를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4]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옥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중앙은행 밖의 모든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 채산제로 운영하는 원칙에서 수지균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중앙은행을 중추로 하여 그 지점으로 되어 있던 평양시은행을 비롯한 각 도은행들이 상업은행으로 전환되어 채산제로 운영된다"[5]고 지적하고 있다.

한은정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저금사업에 참가하는 주민들이 저금한 돈을 제때에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담보해주며, 예금

2) 장영란, "상업기업소의 경영자금리용에서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3년 2호 참조.
3) 안승진, "현시기 환률의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방도에 대하여", 『경제연구』, 2017년 제2호 참조.
4) 고금혁, "현시기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6년 제62권 제4호, p.130.
5) 전옥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을 자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중요요구", 『사회과학원학보』, 2019년 제2호, p.38.

리자율과 대부리자율을 바로 정하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여러 가지 저금형태를 적용하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기술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6]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인선은 "상업은행은 여러 가지 금융수단과 방법을 옳게 이용하여, 기관·기업소들과 주민들 속에 잠겨 있는 유휴화폐자금을 생산과 건설에 적극 동원·이용하여,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한 봉사 및 신용활동을 능동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7]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북측에서는 금융산업발전에 대한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경협은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며,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독자 혹은 합영회사의 설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남북간 금융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협력과 진출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II. 김정은시대 전자결제카드의 출현과 이용

조선중앙은행의 김천균 총재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정책은 자기 나라의 잠재력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

6) 한은정, "현시기 사회주의사회 화폐유통의 공고화실현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6년 제4호 참조.
7) 박인선, "사회주의상업은행관리에서 나서는 기본원칙", 『경제연구』, 2019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55.

수요를 국내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민생활 영역에서 카드와 전자화폐의 활용 등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다"[8]고 지적하고 있다.

무역은행은 2013년부터 외화 전자결제카드인 〈나래〉를 발행하였으며, 국내 외화봉사단위들에서 상품 및 봉사(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때 널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래〉카드는 모든 대금지급을 무현금결제의 방법으로 신속·정확히 진행할 수 있으며, 봉사단위들에서 잔돈처리를 깨끗이 할 수 있고, 환전의 불편함이 없어지도록 한다.[9] 나아가 거시적으로 전자결제의 보편적 이용으로 유동자금이 결제과정에 머무르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자금회전속도를 높여 상품유통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림 1〉 무역은행이 발행한 나래카드

자료: 저자 수집자료.

8) 『조선신보』, 2015년 2월 22일.
9) 평양에서 외화상점의 상품은 주로 달러로 거래되는데 달러의 잔돈처리가 잘 되지 않아 거스름돈을 생수나 껌 등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

전자결제카드 〈나래〉는 지정된 무역은행 봉사지점들에서 발행하며, 발행된 카드는 전국의 모든 외화봉사단위들에서 제한 없이 카드잔고 범위 안에서 상품 및 봉사대금 결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와 카드 사이 송금과 핸드폰에 의한 대금결제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카드발행단위들에서는 카드를 발행받으려는 손님(외국인과 내국인)으로부터 외화현금을 받고, 당일 외화교환시세에 따라 환산된 외화를 카드에 입금한다. 카드보안을 위하여 손님들은 카드를 발행받을 때 교환원의 안내에 따라 카드에 본인의 암호를 설정하며, 카드 소지자는 카드로 대금을 지불할 때 암호를 사용하여 지불한다. 카드의 잔고보충은 임의의 지정된 외화봉사단위들에서 할 수 있으며, 카드 잔고를 외화현금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으려는 카드 소지자는 카드발행은행에서 해당 봉사를 받을 수 있다.

〈나래〉카드는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장점이 존재한다. 첫째, 익명성이다.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물론하고 수중에 외화만 있으면 〈나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행봉사단위는 고객의 신분증이나 여권 등 그 어떤 고객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며, 2유로 혹은 3달러의 가입비만 지불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서 카드소지자의 카드거래와 관련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둘째, 환율공시의 용이성이다. 〈나래〉카드에 입금되는 금액은 외화이기 때문에 무역은행은 국제시장의 환율시세를 참조하여, 또한 국내의 외화수요와 외화유통량에 근거하여, 매일 달러와 유로 및 위안화의 환율시세를 용이하게 고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환율고시에서 국내 원화의 환율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외부의 주목도 피할 수 있다.

〈나래〉카드의 익명성과 용이성으로 인하여 현재 북측의 대부분 외화 봉사단위들에서는 〈나래〉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중앙은행에서는 2014년에 내화카드인 〈전성〉카드를 발행하였으며, 대성은행에서는 2016년에 외화카드인 〈금길〉카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현재 북측에서는 〈나래〉와 〈전성〉 및 〈금길〉카드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그림 2〉 전성카드와 금길카드

자료: 저자 수집자료.

전자결제카드의 발행과 이용에 대하여 북측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다. "최근 공화국의 중앙은행 모든 지점들과 많은 봉사단위들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전자결제체계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성〉카드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은 모든 대금지불을 무현금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신속·정확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른 카드소지자에게 송금할 수 있고, 은행에서 현금을 다시 찾아쓸 수도 있다. 현재 중앙은행의 모든 지점들과 무역은행, 대성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 그리고 광복지구상업중심,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옥류관, 청류관 등 봉사단위들, 각 도내 체신기관들이 〈전성〉카드에 의한 전자결제체계를 도입하여 우리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문명

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10]

"최근 주민들속에서 〈전성〉카드에 의한 전자결제봉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전성〉카드에 의한 전자결제봉사는 한마디로 상품대금과 봉사요금 및 각종 사용료를 현금을 대신하는 전자수단인 카드를 이용하여 지불하는 결제봉사이다. 〈전성〉카드에는 본인이 은행에 입금시킨 금액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이 카드를 가지고 대동강맥주도 봉사 받을 수 있고, 광복지구상업중심에서 상품도 살 수 있으며, 먼 곳에 있는 친척, 친우들에게 송금도 할 수 있다. 지금 전국의 수백 개의 지점들에 카드취급소가 개설되었으며, 인민봉사부문의 1천여 개 단위들에 이 체계가 도입되어 경영활동과 봉사활동에서 은을 내고 있다. 〈전성〉카드에 의한 우리식의 전자결제봉사는 사회주의계획경제,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다 문명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11]

Ⅲ. 김정은시대 상업은행의 출현과 발전

북측에서 중앙은행은 오랜 기간 중앙은행의 기능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여 왔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의 방침에 의하여 2014년 이후 상업은행의 기능은 중앙은행에서 분리되었으며, 상업은행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밑에

10) 『조선의 오늘』, 2016년 3월 16일.
11) 『메아리』, 2017년 6월 14일.

자금융통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면서 자체의 업무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원에 의한 통제를 하는 국가금융기관으로 되었다. 현재 북측에서 상업은행은 '금융기관채산제'를 실시하는바, 금융기관채산제는 상업은행들이 금융업무를 통한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경영활동방식을 가리킨다.

현재 중앙은행은 나라의 전반적 화폐유통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모든 은행들에 대한 금융적 지도와 감독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금융지도기관으로 되었다. 그 외에 중앙은행은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올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책략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상업은행은 자체의 업무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해야 하며, 봉사성과 신용을 높이고, 업무거래의 편리성과 신속정확성을 보장하며, 금융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상업은행은 주민저금과 대부, 결제방법과 이자율 공간 및 업무활동과정에 이루어지는 업무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며, 국가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

상업은행의 기능에 있어서, 상업은행은 우선 기관·기업체들에 자금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을 발전시키고 생산물유통을 원만히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상업은행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자금융통과정에서 통제하는 바, '원에 의한 통제'는 상업은행의 중요한 기능이다. 셋째로, 대내기능과 대외기능을 수행하는바, 대내기능은 지난 시기 중앙은행이 수행하던 기능에서 상업은행에 속하는 기능을 그대로 넘겨받아 현금유통조직, 무현금결제, 저금 및 대부조직. 고정재산등록, 노동보수자금 지불 등이 있으며, 대외기능에는 대외결제기능, 외화관리기능, 환자조작기능, 수형, 채권의 인수 및 할인 등이 있다.

상업은행은 자금을 융통하는 기관인 만큼 자체의 자금원천을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하는바, 상업은행의 자금원천에는 우선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저금, 송금 등이 있으며, 상업은행은 이러한 자금을 내줄 때까지 자기자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상업은행의 자금원천에는 또한 대부이자수입, 봉사를 해준데 따르는 수수료 수입, 은행의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수입금 그리고 은행의 기본업무 외에 여러 가지 봉사업무와 관련한 수입 등이 있다. 상업은행의 자금원천에는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부금이 있으며, 상업은행은 자체의 대부원천이 부족할 때 다른 금융기관이나 상급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상업은행은 자금원천을 늘리기 위하여 저금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수중에 있는 유휴화폐자금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저금사업에서 봉사성을 높이고 편리를 적극 보장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직사업을 벌리며, 저금자료들을 국가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절대비밀로 취급해야 한다.

"저금사업이 잘되지 않는 기본원인은 바로 은행기관들이 주민들과의 거래에서 신용을 지키지 않는데 있으며, 상업은행들은 주민들과의 신용을 법으로 여기고 어김없이 지키며, 다양한 저금형식과 방법을 받아들이고 개인저금의 비밀을 엄수하여, 저금사업이 활기 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12]

12) 김정은,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16.

〈그림 3〉 상업은행의 저금 관련 소개자료

자료: 저자 수집자료.

현재 북측에는 무역은행, 대성은행, 대동신용은행, 고려은행, 조선통일발전은행, 광선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하나은행, 제일신용은행, 단천상업은행, 압록강개발은행, 조선합영은행, 오라은행, 황금삼각주은행, 일심국제은행, 개발신용은행, 국제전시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제일주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조선대중화상업은행, 모란봉은행, 민사합작은행 등[13] 30여개의 상업은행이 있다.

각 상업은행들은 주민들의 저금사업을 위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으며, 이자율도 매우 높다. 필자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6개월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연 5~7%,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연 6~7.5%에 달한다. 그리고 주민저금사업에 있어서 우선 세 가지 보증을 약속하고 있다. 우선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며, 다음은 법적으로 개인의 저금비밀을 보장하며(상업은행법 제20조), 마지막으로 국내 원화, 달러, 위안화, 유로 등 화폐로의 환전이 가능하다.

13) 리철웅, "조선의 은행제도", 『동북아논단』, 2016년 제1기, p.39.

그 외에도 상업은행간의 예금 관련 판촉활동과 서비스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예를 들면, 류경상업은행에서는 6개월 이상의 1만 달러 저금 고객에게는 금카드, 6개월 이상의 5천 달러 저금고객에게는 은카드를 발급하여 주는데, 카드소지자는 평양의 북새상점과 류경상점 및 영광식당을 비롯하여 류경상점 산하 각 분점들에서 소비할 경우, 금카드는 5%, 은카드는 3%의 할인을 받으며, 본인의 생일에 소비할 경우, 금카드는 7%, 은카드는 4%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림 4〉 류경상업은행의 ATM기기와 카드 홍보자료

자료: 저자 수집자료.

상기와 같은 높은 이자율과 적극적인 판촉활동 및 친절한 봉사와 더불어 북측에서 주민들의 저금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실시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Ⅳ. 김정은시대 전자상거래의 출현과 발전

1.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

북측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상업이라 부르며 정보기술과 정보수단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상업활동을 가리킨다. 즉 전자상업은 컴퓨터망이나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상업형식이다. 전통적인 상업에 비해 전자상업의 경제적 효과성은 판매와 구매에서의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이다. 전자상업은 구매자들에게 선택권과 편리성을 보장하는 상업방식이며,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지리적 및 시간적인 제한을 받음이 없이 상품판매 및 구매를 진행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폭 넓은 상업활동이다.[14)]

실제로 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하며 전달하는 컴퓨터의 출현과 인터넷이 출현하면서 지식경제시대의 도래가 촉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식경제에서 정보화형식은 디지털화, 전자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로서 이것은 전반적인 경제체계에서 제품생산, 봉사, 효율향상, 기업관리, 유통 및 무역 등의 관념과 조작측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일으켰다. 정보화의 실현으로 유형의 현금, 지표, 보고서, 과학기술문헌자료, 특허정보자료 등을 포함한 많은 정보들은 숫자로 표현되었으며,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전자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전자화된 기업, 전자화된 상점, 전자은행과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들이 출현하도록 추동하였다.[15)]

14) 『로동신문』, 2016년 7월 31일, 평양.
15) 문금철, "지식경제시대 기업관리의 특징", 『경제연구』, 2016년 제1호 참조.

전자상업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상업형식인 것만큼 하루 24시간 동안 아무때나 봉사하여 국제적 범위에서 주문자나 공급자가 다같이 상업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기업체들 사이, 기업체와 소비자들 사이의 전자상업이 광범히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동통신기재를 이용한 이동통신상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사회주의상업에서 전자상업의 도입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상품유통기간을 줄이고, 상품공급사업을 신속정확히 진행하며, 생산발전과 자금순환을 촉진시키고, 인민들의 상품적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16]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전자상업거래는 상업의 새로운 개념으로부터 일반적 개념으로 되고 있으며, 경제생활의 중요한 측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구매자 혹은 판매자로서 전자상업에 참가하는 기업체들은 제품개발과 실현, 거래처리, 제품과 사용자봉사처리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망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전자상업응용프로그램과 봉사에 의거한다. 전자상업거래의 특징은 우선 공급자와 소비자, 기업체들이 새로운 밀접한 관계를 이룩할 수 있게 하며, 시간과 지리적 위치, 의사교환, 유통, 기호 등과 같은 상업에서 제기되던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다. 실례로 전자구획은 소비자들을 위한 전자상업공간의 하나이다. 여기서 구매자들은 요구하는 모든 물건들을 팔거나 살 수 있다. 전자구획은 실시간 대화칸과 게시판 등 여러 가지 소비자들을 위한 봉사들을 제공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들사이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준다.[17]

16) 현정훈, “전자상업의 발전추세”, 『경제연구』, 2016년 제4호 참조.
17) 윤광혁, “전자상업거래와 그 특징”, 『경제연구』, 2015년 4호 참조.

전자상업의 원활화는 금융업무의 높은 정보화수준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금융업무의 정보화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국가금융정보망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실용성있는 금융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며, 망보안사업을 강화하여 금융업무의 컴퓨터화를 우리 식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융업무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및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금융업무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은행기관들에서 금융업무에 전자인증체계를 적극 받아들이고, 신용거래, 현금거래에서 전자결제카드에 의한 봉사체계를 완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반적인 금융정보화 수준을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올려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18]

2. 북측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출현과 발전

가. 〈옥류〉전자상점의 출현과 발전

북측에서 제일 처음 출현한 전자상점은 〈옥류〉이다. 인민봉사총국에서 2014년말부터 "인민들의 편의 최우선시", "국산최우수상품 봉사"라는 원칙에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2015년 정초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옥류〉는 국가컴퓨터망과 전자결제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2월부터 휴대전화로도 전자상점 회원에 가입하여 상품들을 검색, 선정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주문받은 상품의 송달도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봉사총국 산하의

18) 전룡삼, "화폐유통의 공고화와 그 실현방도", 『경제연구』, 2017년 1호 참조.

여러 운수사업소들이 전자상점에서 주문된 상품들을 주민구역에 운송하는 사업을 맡아하고 있다.[19]

〈옥류〉 전자상점에는 평양양말공장, 선흥식료공장 등 평양시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하는 인기제품목록과 보통강정보기술교류사, 평양목란비데오상점, 해당화관, 창전해맞이식당을 비롯한 유명한 상점, 식당들의 상품과 갖가지 요리목록들 그리고 지방상점들에 있는 인기상품들이 올라와 있으며, 주민들은 각종 요리와 식료품, 화장품과 의약품, 신발류와 가방류를 비롯하여 북측에서 생산한 각종 제품들을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그림 5〉 '옥류' 전자상점 소개

자료: 저자 수집자료.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전자카드로 금액을 지급하며,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상업단위와 전화통화를 하여 상품의 속성들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다. 이 봉사체계로 사람들은 해당 단위들과 연계하여 구입하려는 상품을 주문하고 필요에 따라 상품송달을 요구하기도 한다. 〈옥류〉

19) 『조선신보』, 2015년 4월 2일.

전자상점이 도입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상점에 가지 않고도 집에 앉아서 컴퓨터망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 상점들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어 날이 갈수록 가입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20]

나. 〈만물상〉 전자상업홈페이지의 출현과 발전

〈옥류〉에 이어 2015년 상업과학연구소에서 〈상연〉전자상점을 설립하였으며, 그 외에도 〈만물상〉, 〈내나라〉, 〈광흥〉, 〈앞날〉, 〈은파산〉 등 전자상점들이 설립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만물상〉이다.

〈그림 6〉 '만물상' 홈페이지 및 상품소개 화면

자료: 저자 수집자료.

20) 『조선의 오늘』, 2016년 3월 25일.

2015년 12월경에 연풍상업정보기술사에서 국가컴퓨터망과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다양한 상업봉사를 진행하는 전자상업홈페이지 〈만물상〉을 개발하였다. 전자상업홈페이지는 전자상점, 경제정보, 상품올리기, 통보문, 나의 상품, 식당상점소개, 식료품주문 등 부문별기능이 있다.[21]

전자상업홈페이지의 주요기능인 전자상점에서는 보건·의료품, 건재·공구, 악기·체육기계, 운전기재·차부속, 조명기구, 기계·설비, 묘목·화초, 사료·먹이 첨가제, 소프트웨어/DVD, 전기전자제품, 원료, 용기, 할인상품, 관광, 특산물 등 수십가지 부류에 달하는 상품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자료들이 있다. 생산기업소들과 상점들은 자기 단위의 제품,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자체로 필요할 때마다 올릴 수 있고, 구매자들도 국가컴퓨터망과 모바일통신망에 가입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판매자들은 판매하려는 상품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 관리할 수 있고, 통보문기능을 이용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의견교환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으로 〈만물상〉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단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제품구입을 위해 홈페이지를 열람하는 사람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의 하루상품 등록건수는 100건이 넘고, 하루 홈페이지 열람자수는 국가컴퓨터망과 모바일통신망까지 포함하여 6만여 명이나 되며,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22]

그 외에도 〈만물상〉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열람 및 봉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홈페이지 가입자들의 경제생활,

21) 『조선의 오늘』, 2016년 11월 12일.
22) 『메아리』, 2017년 7월 2일.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제정보의 열람 및 교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요구하는 제품을 봉사하는 상점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느 생산단위의 제품이 가장 질이 좋은가 하는 상점위치정보, 생산단위 경쟁정보, 가격정보, 새 제품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이 몇 개이며, 제품들의 질적 차이, 사람들의 수요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상〉은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있다.[23]

이로 하여 전자상업홈페이지 〈만물상〉 등의 봉사와 함께 생산단위들의 기업전략과 상점들의 판매방식, 사람들의 제품구입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현재 전자상업홈페이지 〈만물상〉 등은 사람들의 소비품 구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들간의 생산경쟁과 제품의 질 경쟁도 추동하고 있다.

〈그림 7〉 스마트폰에서의 '만물상'

자료: 저자 수집자료.

23) 『조선의 오늘』, 2017년 6월 24일.

Ⅴ. 금융산업의 미래

김정은시대에 진입한 이후, 조선로동당은 2013년 3월부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실시하여 경영권리를 현장에 부여하고, 일한만큼 분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산적극성을 높였고,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나아가 2014년 5월 30일에 김정은 위원장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노작을 발표하고[24],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적극적인 실현과 더불어 기업에 독자적인 제품개발권·품질관리권·인재관리권을 부여하였으며,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경제와 시장화 발전을 가속화 하였다.

2016년 5월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3 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며, 전당·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실시하였다.[25]

조선사회과학원의 리기성 연구사는 김정은시대 2012~2015년의 경제성장률은 약 7~8%에 달하며, 특히 2015년의 경제성장률은 7.5%에 달하였다고 하였다.[26] 그리고 전례 없이 엄격한 국제제재가 가해진 2017년의 경제성장률도 3.74%에 달하고 있다.[27]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금융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24) 『조선신보』, 2015년 1월 26일.
25) 『중앙통신』, 2018년 4월 21일.
26) 중국 연변대학교와 조선사회과학원은 2016년 4월에 내부학술회의를 조직하였는바, 본 회의에서 리기성연구사는 이러한 수치를 처음으로 공개하였음.
27) 『연합뉴스』, 2018년 10월 29일.

따라서 북측에서는 국내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고자 2013년부터로 전자결제카드인 〈나래〉카드와 〈전성〉카드 및 〈금길〉카드를 발행하였으며, 주민들의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상업은행의 시범적 개혁을 실행하고, 개혁의 성공과 더불어 30~40개의 상업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활발한 예금과 대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및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행에 따라 자사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며 판매할 수 있는 〈옥류〉, 〈상연〉, 〈만물상〉, 〈내나라〉, 〈광흥〉, 〈은파산〉, 〈앞날〉 등 많은 전자상점들을 설립하여 상품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상품유통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만물상〉 홈페이지에 등록된 상품은 600여종의 3만여 점이나 되며, 주로 옷과 신발, 가정용품, 전기전자제품, 식료품, 보건의료품 등 수많은 상품들이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 열람자수는 매일 평균 6만여 회에 달하고 있다.[28] 나아가 전자상거래업체들 사이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과 현황에 대하여 적극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만물상〉은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阿里巴巴)〉 발전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앞날〉은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징둥(京东)〉의 발전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전례 없는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측에서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에 의거할 수밖에 없으며, 최대한 국내 자금조달을 통한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과 금융사업 방법의 개선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주민들의 유휴화폐를 적극 동원하여, 이를 기업활동에 적극 지원할 것이다. 즉 북측에서 전자결제카드의

28) 『조선신보』, 2017년 12월 4일.

사용 범위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상업은행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전자상거래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조선원화와 달러의 환율은 지속적으로 1$=8000원의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로 하여 북한 원화에 대한 북측주민들의 신뢰도는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상업은행에 대한 신용도도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주민들도 대규모 예금을 하고 있다. 향후 북측에서는 변화하는 현실적 요구에서 출발하여,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금융상품들을 더욱 많이 개발할 것이다. 예를 들면, 머지않아 공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넣어 표기한 2차원 상품식별부호인 QR 코드도 북측에서 널리 이용될 것이다. 어쩌면 몇 년 후 북측에서 서울보다 제로페이가 더욱 활발히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와 주변지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환황해권과 환동해권 구성국가와 함께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북측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동북아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와 연계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북 금융산업간 협력은 특히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므로 북측에서의 금융산업의 발전동향에 우리는 항상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금혁, “현시기 은행기관들을 상업은행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6년 제62권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김정은,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년.

김영남, “유휴화폐자금동원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4년 제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리철웅, 조선의 은행제도, 『동북아논단』 제1기 제39페지, 창춘: Airiti, 2016년.

문금철, “지식경제시대 기업관리의 특징”, 『경제연구』, 2016년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박인선, “사회주의상업은행관리에서 나서는 기본원칙”, 『경제연구』, 2019년 제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윤광혁, “전자상업거래와 그 특징”, 『경제연구』, 2015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안승진, “현시기 환률의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방도에 대하여”, 『경제연구』 2017년 제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장영란, “상업기업소의 경영자금이용에서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3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전룡삼, “화폐유통의 공고화와 그 실현방도”, 『경제연구』, 2017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전옥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을 자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중요요구”, 『사회과학원학보』, 2019년 제2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9.

한은정, “현시기 사회주의사회 화폐유통의 공고화실현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6년 제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현정훈, “전자상업의 발전추세”, 『경제연구』, 2016년 제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연합뉴스』

『조선신보』

『메아리』

『조선의 오늘』

『중앙통신』

『로동신문』

신한반도체제 구현을 위한 평화경제 단계별 추진전략

정유석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Ⅰ. 들어가며
Ⅱ. 신한반도체제의 등장 배경과 의의
Ⅲ. 신한반도체제의 개념과 구조
Ⅳ. 평화경제 추진전략
Ⅴ. 기대효과

〈요 약〉

2018년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의 평화 분위기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최근 한반도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가 반영된 우리 주도의 정책인 '신한반도체제'를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 방안으로 '평화경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는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주도의 추진전략 수립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신한반도체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제공동체'를 계승하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로 남북 간 새로운 평화협력 미래의 100년을 설계한 국가 비전이다.

'평화경제'는 '신한반도체제'의 핵심적인 실행전략으로 '先평화정착–後경제발전'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완전한 평화를 우선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발전으로 다시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공고히 하여 안보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지향한다.

‘평화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되, 우리 주도의 남북 협력사업을 우선 개발하고 남북의 동반 성장을 위한 남북공동협의체 구성 등 민간 영역에서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북한 내부 경제성장을 고려한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의 자생력 극대화와 아울러 우리의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 구조 개편과 동반성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 이행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동북아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시작으로 대북제재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고려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후 협력 본격 확대 국면에 대비하여야 하겠다.

Ⅰ. 들어가며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한반도의 정세는 2018년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의 분위기로 급반전하였다. 남북의 두 정상은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사실상 종전을 선언하였으며, 70여 년 이상 적대관계를 지속하였던 북한과 미국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비록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입장차로 인하여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역사상 첫 만남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1] 이후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1) 남북 정상은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하여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도출하였다.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양국 간의 사실상 종전을 약속하였으며, 기존 남북 공동 선언에 대한 이행을 약속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적대관계를 지속하였던 북미 양국도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관계개선 및 신뢰 구축 등의 포괄적 합의가 담긴 「싱가포르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후 북미 관계는 비록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두 번째 만남의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정상의 예정에 없던 만남 성사를 계기로 다양한 접촉을 통해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어져 평화프로세스의 속도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한반도의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며, 주요 국가 정상과의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전 세계를 향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의지를 표명했다.[2)]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신한반도체제'가 2018년 광복절 축사를 통하여 제시되었다.[3)] 여기에는 최근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반영된 미래 비전이 담겨져 있으며, 그 실현 방안으로 '평화경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냉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주도의 추진전략 수립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신한반도체제」의 등장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그 실현 방안인 평화경제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남·북(3회), 북·미(2회), 북·중(4회), 북·러(1회) 등 10차례의 정상회담에 나섰다.

3)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은 2017년 7월 6일, 독일의 베를린에서 '新한반도 평화비전' (신베를린 선언)을 통하여 5대 기조 및 4대 제안을 북한에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과 동북아 이웃국가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3대 목표·4대 전략·5대 원칙을 담고 있다.

II. 신한반도체제의 등장 배경과 의의

1. 안정적인 동아시아 안보 환경 구축 필요성

동아시아에 인접해 위치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오래전부터 역사·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일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질성과 안보적 긴장 관계로 인하여 오랜 시간 갈등과 대립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높아져 가지만,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인한 외교·안보적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중적인 형태가 고착되고 있다.[4]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독도 영유권 등을 비롯하여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오래된 갈등이 존재한다. 중일 간에도 청일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영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감정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5] 여기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더해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아시아지역 갈등의 원인은 태평양전쟁의 불완전한 종결에 있다. 일본이 전후처리를 위해 미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4) 조한범(2019)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른바 '아시아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의 원인이 미완으로 끝난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에 있으며,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조한범,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목표" (2019 KINU 학술회의), pp.13~15.

5)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釣魚島))와 인근 해역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그 체결과정에서 남북한과 중국의 참여가 일본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그 결과 식민피해를 당한 국가들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전쟁이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일본과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 및 영토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6] 과거 우리가 겪었던 암울한 역사인 일제 강점과 한국 전쟁, 그리고 그 결과물인 한반도 분단체제 역시 이러한 불완전한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강요당했던 주권을 다시 확립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아울러 분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가 동북아 역내 긴장 구조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한반도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분단을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

2020년은 광복을 맞은 지 75년이 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지만, 남북의 분단 체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과거 100년은 외세의 침략과 국제정치의 판도가 한반도를 지배한 시간이었다. 분단체제는 5000년의 한반도 역사를 변모시켰으며 이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남북의 단절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가교인 한반도의 역할에 근본적인 제약을 가져왔다. 남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해 단절되어 있는 한반도를 잇고, 대륙으로 나아갈 통로의 개설이

6) 일본은 이 조약이 전후처리의 준거 규범이 될 것을 인지하고 체결과정에서 고의로 한국을 배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일본은 전범국·패전국에서 미국의 동맹국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이유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으로 이미 시작된 경제 지형의 변화는 남북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한반도를 허브로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와 주변국 모두에게 경제적·안보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분단의 현실은 우리의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군사 안보적 긴장이 계속되는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분단체제로 인하여 지출되는 막대한 군사비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7] 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갈등이 만연해 있다.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비롯하여 높은 이혼율, 낮은 출산율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으며, 남남갈등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과 국론 분열은 모두가 현재의 분단체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도 한반도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상시적인 위협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8]는 우리 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등장한 '신한반도체제'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완전한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지향한다.

7)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이다. 특히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으며, 2020년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2020년 국방예산 정부안).

8) 북핵문제·미사일 실험 등 안보 불안 요인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는 국내외 투자·생산 감소, 외화 유출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인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다.

이에 맞는 추진 정책을 마련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표 1〉 신한반도체제 여건 변화

현재 한반도체제	신한반도체제
• 냉전체제의 유산과 미중 전략경쟁 등 새로운 갈등의 중첩 • 분단체제	• 평화·협력의 새로운 질서 • 사실상의 통일
• 국제 및 동아시아 질서에 종속 • 대립, 갈등 • 제로섬(zero-sum) 관계 • 힘, 이념의 우위 • 대륙과 해양의 단절(한반도는 냉전의 섬)	• 남북한 주도로 새로운 질서형성 • 공존, 공영 • 논제로섬(nonzero-sum) 관계 • 평화와 경제의 네트워크 • 대륙·해양의 연결(한반도는 허브)

자료: 박종철,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자료집』, p.40.

3. 지속가능한 국가 비전 설계

2019년은 3·1운동 발발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 올해 3.1절 경축사에서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100년의 국가전략으로 '신한반도체제'가 제시되었다. 과거 정부들의 대북 정책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가운데 나름대로의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였지만, 궁극적으로 분단체제 극복에는 실패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하여 기존의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소련, 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김영삼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며 대북 화해협력의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북핵 문제가

본격화되어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목표로 하였다. '햇볕 정책'을 앞세워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자원중심의 세계전략과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 한반도정책의 공간 확장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호응을 얻는 데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단절과 갈등이 고착되는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전인 '신한반도체제'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초하되, 평화에 기초한 남북관계 속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국가비전과 전략으로 설계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되면 기존의 대북정책이 이어지지 못한 채 단절되고 이미 합의한 남북간 사안들도 지켜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부침을 막아내고 정권의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장기적 국가비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신한반도체제'가 제시되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평화를 통한 번영을 주창하였는데, '신한반도체제'의 완성을 위한 평화경제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공식석상과 주요 회의에서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평화경제 추진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평화경제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제안한 '신한반도체제'는 남과 북의 구성원이 자유로이 교류하며 경제적 터전을 만드는 남북협력의 비전"으로 제시 되었다(광복절 경축사,

’18.8.15). 올 해 3·1절과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정의하고 “남북관계의 전환을 기초로 동북아시아 차원의 새로운 협력 질서 구축”을 제시하였다(3·1절 기념사, ’19.3.1). 또한 “‘평화경제’에 통하여 새로운 한반도 문을 여는 세 가지 목표로, ‘책임 있는 경제 강국’과 ‘대륙과 해양의 교량 국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평화경제’의 구축”을 강조하면서(광복절 경축사, ’19.8.15), ‘신한반도체제’의 나아갈 방향과 ‘평화경제’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각종 참모 회의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수석보좌관 회의, ’19.2.11), “남과 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평화경제의 시대”(수석보좌관 회의, ’19.2.25) 등의 발언이 있다.

Ⅲ. 신한반도체제의 개념과 구조

1. 개념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형 세계전략이자 장기적인 비전으로 설계되었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외교와 안보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전략의 성격을 가지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북방과 남방을 연계하는 한국형 세계전략이라고 하겠다.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분단체제를 구조적으로 해체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신한반도체제'의 목표는 '남북경제공동체'인데, 이에 대한 실행 수단인 '평화경제'는 '한반도신경제구상'에서 발전된 전략의 개념이다.[9] 다시 말해 '신한반도체제'는 평화를 우선하여 분단을 극복하여 동북아시아로 도약하고자 하는 구상이며, 이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세계전략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이다. 시간적 범위를 미래 100년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관으로, 분단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평화적인 질서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수동적 역사의식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을 위한 한반도의 질서가 담겨 있다. 남북이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완전한 평화 질서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의 안보적 긴장과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결국 '신한반도체제'는 비핵·평화체제와 새로운 남북관계에 기초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이다. 또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의 구현, 즉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다. '신한반도체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정책이라기보단 한반도 평화와 연계된 정책을 포괄하는 거대 담론이라고 하겠다.

9)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평화 공존' '남북 공동 번영'의 목표하에서 발전해오고 있으며,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핵심적인 실행방안이다.

2. 비전

‘신한반도체제’는 우리 주도의 능동적 자세로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미래의 역사관이다.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여 남북이 하나의 한반도공동체를 형성하여 포용국가를 완성하는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신한반도체제 구상

자료: 저자 작성

첫째, 미래의 가치관이 제시되어 있다. 과거에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수동적 냉전질서’를 ‘능동적 평화질서’로 전환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즉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인 ‘분단’을 우리의 주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둘째, 사실상 통일에 대한 청사진이다. ‘신한반도체제’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한반도의 모습은 ‘남북경제공동체’이다. 이는 남과 북의 물자와 인원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이 이동하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사실상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가 된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확장시켜 '동아시아책임경제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용국가의 완성이다. 혁신적 성장과 포용적 분배, 사회갈등구조 해소가 어우러진 '포용국가'를 지향한다. 분단이 해체되면 남북 간에 상호 적대감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사회·문화적 공감대로 이어져 미래지향적인 포용국가로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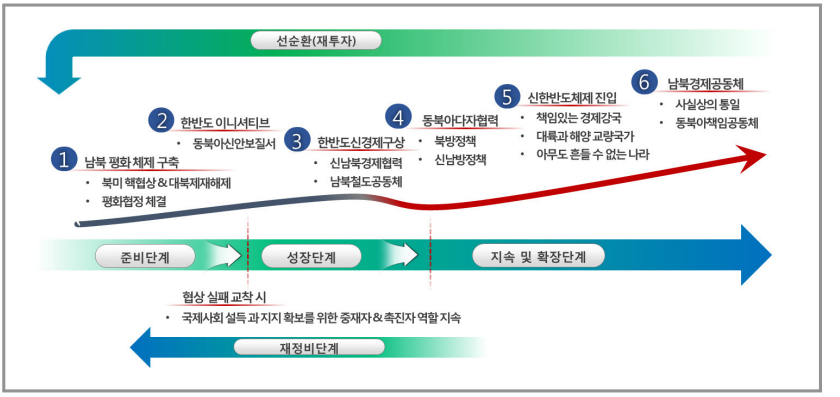
3. 목표와 전략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해체하여 안보적인 긴장과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한다. 한반도에 비핵화가 실현되어 공고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되면, '한반도신경제구상'에서 제시되었던 남북협력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주도로 중국의 동북 3성과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연계하는 육상 교통·물류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축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2차적인 목표로 한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가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하나의 경제 통로로 연결하는 대륙과 해양의 교량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이다. 이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우리가 역내 경제협력공동체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동아시아연합(EAU, East Asian Union)의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신한반도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 '평화경제'

전략이다. 실행전략인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우선적으로 평화를 공고히 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이를 다시 안보 환경 조성에 재투자하여 강화시키는 평화 우선의 선순환 전략이다. '先평화정착-後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로 '분단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 '동북아신안보질서 주도', '남북경협(한반도신경제구상)', '신북방·남방정책: 동북아책임플러스'의 단계를 거쳐 2045년 사실상 통일을 목표(2045년 'ONE KOREA')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10] 평화경제는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평화협력공동체, 경제협력공동체, 문화공동체의 선순환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하기 위한 능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그림 2〉 평화경제의 선순환구조



자료: 저자 작성

10)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Ⅳ-2절에서 후술

Ⅳ. 평화경제 추진전략

1. 평화경제 전략의 모델과 구조

가. 이론적 배경

‘평화경제’의 이론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하나의 이론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논리가 접목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다. 1989년 경제공동체를 통합과정 중의 하나로 규정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문화·경제 공동체의 성격과 형태, 실천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그 논의에도 한계가 있다. 평화경제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은 다음과 같다.

조민(2006)은 평화경제론이 정부의 평화 번영정책이라는 이론적 틀과 비전 위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법론적 열쇠 개념으로 제시되었으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평화경제론은 남북한 간 공고한 경제적 유대 또는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평화를 정착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교역 증대가 당사국들의 경제 규모와 무관하게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논리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무역의 의존도에 따라 초래되는 비용의 불균형을 설명하긴 불가능하며 남북의 교역의 경우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김연철(2006)은 평화경제론을 기존의 이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고 남북관계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 그리고 국제환경을 포괄적으로 이론화하고자 시도하여 경제를 통한 평화 추구라는 경제평화론을 한 축으로 하고, 평화를 통한 경제협력의 발전을 다른 한 축

으로 하는 구조로 정의하였다. 즉 평화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경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경제협력의 효과를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만 기대하거나, 그 장기적 효과를 기능주의적 확산효과(spill over)로만 설명하는 것은 평화와 경제의 관계적 성격을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신한반도체제'의 평화경제는 평화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데 방점이 있으며, 경제협력공동체 조성을 기초로 경제적 발전과 동시에 평화조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협력의 기능적인 면이 강조된 기존의 '평화경제론'과 차이가 존재한다. 평화경제의 이론적 해석은 특정 논리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기보단 종합적 영역으로, 지정학(geopolitics), 지경학(geoeconomics), 지문화학(geoculture)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한 동북아 신시대의 창의적 발상이자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하겠다.

나. 모델과 구조

평화경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모델은 '유럽철강공동체(ECSC)'에서 착안되었다. 제1·2차 세계대전 시 적대국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1951년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유럽철강공동체를 창설하였다.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석탄과 철강의 전략물자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하였다.[11] ECSC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유럽

11) 석탄과 철강 산업의 통합은 오랫동안 전쟁물자 생산에 사용되었던 이 지역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며, 이제 탄생할 생산의 연대(solidarité de production)는 프랑스와 독일이 장차 모든 전쟁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로베르트 쉬망(Robert Schuman)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 1950년 5월 9일).

국가 간 협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하나의 공동체(Community)로서의 유대감이 형성, 유럽경제공동체(EEC, 1951년)를 거쳐 유럽연합(EU, 1993년)으로 발전하여 전쟁과 대립의 역사로 점철된 유럽을 하나의 정치·경제 공동체로 통합하였다.[12] 유럽과 한반도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유럽의 모형이 '공동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도입한 점과 가치적·사회적 통일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평화경제는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가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화협력공동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경제협력공동체는 한반도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평화경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평화협력공동체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의미하며,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추진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책임공동체를 실현시켜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질서를 수립하는 구조이다. 즉 평화경제는 '신한반도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전략이며, 평화를 우선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다시 평화에 재투입하는 선순환을 기본 구조로 한다. 경제협력공동체는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하여 한반도신경제구상에 기초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신북방정책을 통한 중국·러시아·몽골 등과 협력, 신남방정책을 통한 인도·필리핀·베트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구조이다.

12)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집행부(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재판부(European Court of Justice), 단일통화(Euro),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을 제도화하였다.

〈그림 3〉 평화경제의 구조

자료: 저자 작성

한반도신경제구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한국 경제의 新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한반도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생존과 미래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북한의 지경학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 남북한의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창출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부족, 인구 노령화, 저출산, 성장동력 상실 등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그리고 남북한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담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일대일로·신동방정책 등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통합 노력에 대응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북방지역을 새로운 '번영의 축'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대외정책 중 하나이다.[13] 동북아철도공동체의 구상, 에너지 협력, 9-BRIDGE 협력 사업을 담고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공간 확보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대륙진출 전략이다.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한반도-유라시아 벨트'를 구축하여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연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신북방정책과 짝을 이루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개념이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3P' 개념을 바탕으로, 상품교역 중심에서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안보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아세안 등 남방국가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 담겨있다.

2. 추진원칙과 단계별 전략

가. 추진원칙

'신한반도체제' 구현을 위한 '평화경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3) 북방경제권은 언어장벽,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서방의 대러 제재 등 투자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규모가 크지 않으나, 최근 급속한 기업환경 개선추세와 북방지역 국가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시장확대를 위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초국경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에게 시장 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에너지·물류망 구축 등 신성장 동력 확보가 요구된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의 과정을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형성, 정책채택,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5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현재 신한반도체제는 정책형성의 과정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이론화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공고히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 현 정부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신한반도체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세미나 및 공청회·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이해가 담긴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14] 국가 공식 정책으로서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주체의 다양화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의 거시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공식 정책으로의 인증을 받아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주체의 다양화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마련해야 한다.

첫째, 평화경제는 반드시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협력 사업 시작 전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조하되, 우리 주도의 남북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개발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은 신북방정책 및

14) 30년 동안 우리 통일정책의 근간이 되어오고 있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당시 여야의 정당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으며, 이후 국토통일원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각 정당, 민간통일운동단체, 학생단체 등의 주장을 취합·분석한 토대 위에서 확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과 250여 회의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신남방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되, 주변국의 '일대일로', '인도 태평양전략', '신동방정책', '초원의 길' 등 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내부 경제성장을 고려한 개발협력을 추진하여 한다. 북한의 자생력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구조 개편과 동반성장을 모색하여 남북동반성장의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평화경제는 반드시 남북동반성장을 지향하여야 한다. 평화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에 있다. 북한 내부 경제성장을 고려한 개발협력을 추진하여 자생력을 극대화하고, 우리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구조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평화경제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평화경제 이행 시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우선 이행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사업이 상호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내야만 한다.

셋째, 평화경제 이행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기존의 남북합의서에 기초한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되, 지자체와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 영역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경제 실행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자협력을 제도화하여 평화경제가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호 호혜적 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아시아의 완전한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에 대한 주변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들이 경제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단계별 추진전략

평화경제의 추진은 여건 조성 및 제도화의 '준비기', 협력을 본격화하는 '이행기', 지속과 확장의 '완성기'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대북제재와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현재의 대북제재 또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평화경제 달성을 위한 남북협력은 반드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새로운 협력 사업은 물론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의 기존 사업의 재개를 모색함에서도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기존의 협력 방식, 결제 수단, 단계적·점진적인 재개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마련하여야 한다.

'준비기'는 평화경제의 여건 조성과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한다.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핵·평화체제프로세스에 대내외적 역할을 지속하여 안보적 리스크를 해소해야한다.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분단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평화체제를 위한 선제조건이라 하겠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이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남북 간의 물적·인적 교류에 대한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대북제재 해제 이후 북한과의 전면적인 개발 협력에 대비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개발 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적 준비를 한다. 북한이 현재의 국제경제체제에 편입하여 국제사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이다.

〈표 2〉 평화경제 단계별 추진전략

단계	추진 사업
준비기	[여건조성 및 제도화] 1 평화경제를 통한 '신한반도체제' 국가 비전 확립과 연속성 확보 • 공청회·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정책 공고화 2 비핵·평화체제프로세스 지속적 추진으로 안보 리스크 해소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분단체제 극복 3 평화경제 이행을 위한 국내 제도 정비 • 국내 법제 정비(교류협력·통일관련 법제) 및 민관협업체계 구축 4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적 준비 • 북한개발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지원, 국제기구 가입 지원 5 대북제재 국면에서 우리의 독자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개발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한 협력 사업 추진(남북공동협의체 구성)
시행기	[협력사업 본격화] 1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재정비 • 北 27개 경제특별지역을 재설정하여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연계 추진 2 북한 인프라 시설 건설(우선 협력 지역 기반 시설 확보) • 경의선·동해선 우선 연결 및 교량·항만·발전소 거점 시설 마련 3 동북아 다자 협력사업 추진(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협력) •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초원의 길' 접점에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구축 4 중국·러시아 철도 연결 타진으로 '동북아철도공동체' 추진 • '동북아수퍼그리드' 를 통한 에너지 협력 강화
완성기	[지속 및 확대] 1 '남북경제공동체'의 구현으로 '사실상의 통일' • 신한반도체제의 완성으로 '2045 One Korea' 시대 개막 2 동북아 거점 국가 간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 남북한연결철도(TKR)완성 및 중국(TCR)과 러시아(TSR) 철도 연결 3 동북아 교량국가를 넘어선 허브국가 건설 • 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전략 및 로드맵에 기초한 다자협력체제 가동 4 한반도경제공동체가 주도하는 동북아책임경제공동체 구축 • 아세안안보포럼(ARF), 동북아지역안보포럼(NEARF),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확대

자료: 저자 작성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원활한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위해서 국제기구 가입 조건의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과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존의 남북협력 사업들의 재개를 위해서도 선행해야 할 많은 과제가 상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15]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북한의 경제 발전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교류와 투자 관련 법제 등을 정비하여 본격적인 개발 협력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기'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대북제재가 대폭 완화 혹은 전면 해제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협력 사업이 본격화되는 이 시기에는 우리의 주도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신한반도체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하여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고 알려진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설정한 27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중에서 협력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북한에 적용 가능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남북한 산업을 연계하고 상호 보완·호혜적인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환동해·환서해 경제권역 설정과 DMZ와 남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경제구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 지역에 교량·항만·발전소 등의 거점 인프라 시설을 마련하고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우선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한편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협력 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다자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15)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기술협력 사업의 한 형태로, 국제사회는 1980년대 동유럽과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의 명칭으로 체제전환국과 개도국에 대한 시장경제 및 경제 발전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초원의 길’ 등의 주요 정책을 면밀히 파악한 이후 주요 거점에 초국경 경제협력지대를 구축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는 철도 연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철도공동체’에 관한 합의점을 마련하고 동북아시아의 국가들과의 미래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여 ‘동북아수퍼그리드’를 완성한다.

‘완성기’는 평화경제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의 구현으로 ‘사실상의 통일’에 진입하는 시기이다. 남북 인원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고,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권역이 되는 ‘2045 One Korea’ 시대이다. 남북한 연결철도(TKR)가 완성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로서의 준비를 마치고 ‘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중국(TCR)과 러시아(TSR) 철도연결을 우리의 주도로 본격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 거점 국가 간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하여 교량 국가를 넘어선 허브국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의 일일 생활권이 형성되면, ‘동북아책임경제공동체’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며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동북아지역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RD),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등의 확대를 통해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아시아국가연합체’의 형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Ⅴ. 기대효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을 통한 ‘신한반도체제’ 비전이 제시되었다. 모든 구성원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남북협력의 비전이다.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 수단은 평화경제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하나의 시장과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핵화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건을 고려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기존의 사업들과 함께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간의 협력 사업이 확대될 경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이 실현되는 한반도경제공동체, 즉 사실상의 통일이 완성될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가 실현되면 인구의 양적 증가로 8천만 명의 단일 시장이 형성되어 풍부하고 안정적인 내수 시장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한반도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이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수익성이 상승되어 대외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남북의 기업에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분야별로 남북한의 장점이 결합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의 재편이 될 경우 동반 경제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서해 경제·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에너지·자원 협력, 신산업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SOC 구축 등 신규 생산 및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생산·투자 유발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본격화되면 현재 처해있는 저성장, 고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자리매김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평이 대륙과 해양으로 확장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여 명실상부한 '교량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반도 교통

·물류망 구축을 통해 대륙·해양경제권과 연계되어 동북아 주요 도시와 1일 생활권이 형성되고 물류 수송 기간이 단축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물류·교통·에너지·자원 벨트가 구축되어 동북아와 유라시아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으로 인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어, 이는 국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해외자금 조달 비용 절감, 해외투자 증대, 기업 가치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선순환 과정에서 갈등이 완화될 것이며, 이는 사회통합 제고에 기여하게 되어 포용국가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철,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6.

이정철, “참여정부의 남북 경제공동체론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1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7.

임강택, “경제협력공동체 추진 전략과 과제: ‘평화경제’를 중심으로”, 『2019 KINU 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통일연구원, 2019.

박종철, “신한반도 이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통일연구원, 2019.

조 민, “남북경제공동체 현성의 이론적 틀: 평화경제론”,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조한범,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이해”, KINU Insight 2019-07(온라인 시리즈), 서울: 통일연구원, 2019.

_____,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목표”, 『2019 KINU 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통일연구원, 2019.

_____, “우리가 만든 한반도 대전환, 능동적 평화질서 구축으로 이어져야”, 『통일시대』 제152권, 2019.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17.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말글집(완전히 새로운 시작)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연설문집 별권(국무회의·수석보좌관회의)

통일부 (www.unikorea.go.kr)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남북협력기금 통계

• 남북협력기금 통계

남북협력기금 통계

(2019년 11월말 현재)

1. 조성 및 사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말	2019년중	누 계
조성	정부출연금	51,405	1,000	52,405
	정부외출연금	27	0	2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80,447	2,000	82,447
	대출금회수	2,917	52	2,969
	기타수입	2,305	44	2,349
	기금운용수익	7,496	18	7,514
	합 계	144,597	**3,114**	**147,711**
운용	기금지원	69,570	648	70,218
	· 유상지원	30,660	26	30,686
	· 무상지원	38,910	622	39,532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	57,452	2,000	59,452
	사업비용	422	17	439
	사업외비용	16,308	460	16,768
	자금운용	845	△11	834
	· 공자기금예탁	-	-	0
	· 여유자금운용	845	△11	834
	합 계	**144,597**	**3,114**	**147,711**

* 합계 = 기금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 + 사업비용 + 사업외비용 + 자금운용

2. 연도별·자금별 기금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5이전	2016	2017	2018	2019.11	누 계
경상사업	남북사회문화교류	인적왕래지원*	404	-	-	-	-	404
		사회문화협력지원	521	23	37	100	37	718
		소 계	925	23	37	100	37	1,122
	인도적사업	이산가족교류지원	967	16	7	51	35	1,076
		인도적지원사업	16,389	6	13	26	280	16,714
		소 계	17,356	22	20	77	315	17,790
	남북경제협력	경제협력기반조성	11,502	1,535	600	1,818	262	15,717
		교역경협보험	1,829	2,954	1	96	8	4,888
		소 계	13,331	4,489	601	1,914	270	20,605
	기 타	사회문화협력기반조성	15	-	-	-	-	15
	합 계		**31,627**	**4,534**	**658**	**2,091**	**622**	**39,532**
융자사업	인도적 사업(융자)		7,842	-	-	-	-	7,842
	남북경제협력(융자)	교역경협사업 자금대출	4,408	728	-	-	-	5,136
		·교역자금대출	1,186	-	-	-	-	1,186
		·경협사업자금대출	3,222	728	-	-	-	3,950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대출	3,854	32	26	26	26	3,964
		소 계	8,262	760	26	26	26	9,100
	대북경수로사업	경수로사업 대출	13,744	-	-	-	-	13,744
	합 계		**29,848**	**760**	**26**	**26**	**26**	**30,686**
총 계			61,475	5,294	684	2,117	648	70,218

*'17년 예산부터 인적왕래지원은 사회문화협력지원에 통합

수은북한경제 기획논단 · 현안이슈 목록

통 권	제 목
2004년 여름호 (통권 제1호)	◈ 기획논단 : 전환기 북한경제의 전개방향과 정책과제 •변화하는 북한경제 평가와 전망 •북한의 대외경제관리체제에 관한 일고찰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해결과제 ◈ 연구분석 : 북한 외화관리제도 변경의 특징과 한계
2004년 가을호 (통권 제2호)	◈ 기획논단 : 북한경제의 국제화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거시경제 관리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현황과 과제 •북한의 과학기술 도입 동향과 남북협력 방안 ◈ 연구분석 :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특징과 도입 효과
2004년 겨울호 (통권 제3호)	◈ 기획논단 : 북한 기업 관리의 효율화 •북한 기업 관리·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북한 기업에서의 노동인센티브 제고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북한 기업의 회계관리 현황 분석
2005년 봄호 (통권 제4호)	◈ 기획논단 : 6·15 남북정상회담과 5년, 평가와 과제 •대북지원과 남북한 농업협력 •남북교역 및 투자 •다자간 국제협력 : KEDO와 TRADP사업을 중심으로
2005년 여름호 (통권 제5호)	◈ 기획논단 : 북한 경제개발모델의 모색 •북한개발을 위한 경제모델의 모색 •베트남 개혁·개방모델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발전모델의 시사점
2005년 가을호 (통권 제6호)	◈ 기획논단 : 개성공단의 경쟁력 강화방안 •북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과제 연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북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방안

통 권	제 목
2005년 겨울호 (통권 제7호)	◈ 기획논단 : 2005년 북한경제 주요 이슈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진행동향에 대한 분석 •북한의 외자도입 현황과 과제 •북한의 對中 경제의존도 심화와 전망
2006년 봄호 (통권 제8호)	◈ 기획논단 : 북한 경제개발의 과제 •북한 경제개발의 방향과 과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개발의 조건과 전망
2006년 여름호 (통권 제9호)	◈ 기획논단 : 북한 개발협력의 전략적 과제 •개발전략 수립의 국제적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규범 : 북한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북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구축방향
2006년 가을호 (통권 제10호)	◈ 기획논단 •개성공단을 둘러싼 현안과 국제협력 과제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2006년 겨울호 (통권 제11호)	◈ 기획논단 •최근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 •2007년 남북 관계와 경협 전망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2007년 봄호 (통권 제12호)	◈ 기획논단 •북·미 경제관계의 변화과정; 제네바 합의에서 6자회담까지 •북·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북 - EU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현안이슈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2007년 여름호 (통권 제13호)	◈ 기획논단 •7.1조치 5주년의 평가와 전망: 경제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7.1조치 이후 북한 거시경제의 변화 •7.1조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변화: 평가와 전망 ◈ 현안이슈 : 최근 북한의 금융개혁 동향

통 권	제 목
2007년 가을호 (통권 제14호)	◈ 기획논단 •북중 간 두만강 지역 국제협력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남북정상회담과 농업부문의 과제 •최근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남북협력의 과제 ◈ 현안이슈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절차와 해제에 따른 영향
2007년 겨울호 (통권 제15호)	◈ 기획논단 •한반도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한전략지역 개발방안 •남북 광물자원개발 협력방안과 과제 •북한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의 목표와 과제
2008년 봄호 (통권 제16호)	◈ 기획논단 •北韓과 국제금융기구: 이슈와 대응 •북한 외화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2008년 여름호 (통권 제17호)	◈ 기획논단 •북한경제의 시장화 여부 평가 •북한 식량문제의 해법 •남북·대륙 철도개발구상과 단계별 발전방안 ◈ 현안이슈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방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영향
2008년 가을호 (통권 제18호)	◈ 기획논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쟁점과 과제 •북한의 국민소득: 추정치와 평가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2008년 겨울호 (통권 제19호)	◈ 기획논단 •북한 수출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북한경제체제의 복합적 딜레마와 미래 전망 •북한 회계제도의 국제화 ◈ 현안이슈 •2009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2009년 기금 지원제도 소개

통 권	제 목
2009년 봄호 (통권 제20호)	◈ 기획논단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운영상황 분석과 향후 제도 개선방향 •북한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현황과 개선과제 ◈ 현안이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UN의 대북지원현황
2009년 여름호 (통권 제21호)	◈ 기획논단 •남북경협 10년, 반성적 평가와 과제 •김정일 정권 10년의 대내 경제정책 평가: '선군(先軍)경제노선'을 중심으로 •北·中간 광물성생산품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 현안이슈 •북한 금융제도와 금융개혁동향
2009년 가을호 (통권 제22호)	◈ 기획논단 •북핵협상과 북미관계개선 전망: 북한 개발에 주는 시사점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현황과 전망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현안이슈 •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과제 •북한의 대외무역현황(2000년~2008년)
2009년 겨울호 (통권 제23호)	◈ 기획논단 •김정일의 북한경제 회복·정상화전략과 거시경제적 결과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와 남북한 협력 방향 •대북 전력증강의 경제적 추진방안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진전과 국제협력과제 ◈ 독일통일 연구자료 소개 •독일 연방하원 앙케이트위원회 보고서

통 권	제 목
2010년 봄호 (통권 제24호)	◈ 기획논단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전망: 북미협상 구도를 중심으로 •북한 화폐개혁의 정치경제적 함의 •북한 경공업 현황 및 향후 발전과제 ◈ 현안이슈 •'10년도 통일부 예산 현황 및 주요 특징
2010년 여름호 (통권 제25호)	◈ 기획논단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북한의 자체 식량 공급능력 평가 •북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컴퓨터 운영체제 '붉은별' 분석을 중심으로 ◈ 현안이슈 •중국의 최근 북한지역 개발 동향과 향후전망
2010년 가을호 (통권 제26호)	◈ 기획논단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에 있어서의 북·중간 교통망 현대화사업 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미·중 양대국의 동북아 전략구도와 북·중관계 •중국의 북한 핵문제 대응전략과 향후 전망 •북한 철강산업의 현황 및 전망
2010년 겨울호 (통권 제27호)	◈ 기획논단 •2010년 남북관계 평가 및 2011년 남북관계 전망 •최근 北中경제관계의 특징과 시사점 •북한 주요 항만의 개발 동향과 시사점
2011년 봄호 (통권 제28호)	◈ 기획논단 •2011년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북한의 경제체제 특징과 전망 •후계체제 구축시기 북한의 대외관계 특징과 전망
2011년 여름호 (통권 제29호)	◈ 기획논단 •북한의 딜레마 : 경제강국 건설과 시장경제 •북한 시장화 측정 : 평가 및 전망 •북한 시장화 및 화폐화의 정치경제적 함의

통 권	제 목
2011년 가을호 (통권 제30호)	◈ 기획논단 •남·북·러 PNG사업이 동북아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북한 경제운용의 변화 •북한의 외화수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
2011년 겨울호 (통권 제31호)	◈ 기획논단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경제 전망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치와 외교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수요 급증과 나진항 진출
2012년 봄호 (통권 제32호)	◈ 기획논단 •김정은 체제의 경제분야 과제와 전망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최근 개정된 북방특구법제의 개혁·개방성
2012년 여름호 (통권 제33호)	◈ 기획논단 •북한의 군수산업: 북한 경제에의 영향과 향후 전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농업과 식량사정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대북 정책 시사점
2012년 가을호 (통권 제34호)	◈ 기획논단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실태: 현황과 쟁점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 과제와 전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대북 정책 시사점
2012년 겨울호 (통권 제35호)	◈ 기획논단 •북한경제 동향과 2013년 변화 전망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 •신정부의 바람직한 對北경제협력 추진방향 ◈ 특별기획 •개성공단의 국제화 전략
2013년 봄호 (통권 제36호)	◈ 기획논단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변화 전망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식량수급 : 현황과 전망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

통 권	제 목
2013년 여름호 (통권 제37호)	◈ 기획논단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의 특성과 그 시사점 •중국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북중관계 전망 •아베 총리 정권의 외교 정책 특징과 한계
2013년 가을호 (통권 제38호)	◈ 기획논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작동 환경 분석 •남북관계 재구축 전략 •러시아 극동개발 동향과 남·북·러 3각 협력 전망
2013년 겨울호 (통권 제39호)	◈ 기획논단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추가지정과 남북경제협력 ◈ 특별논단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the Kim Jong Un Era: Global Persective and Respons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Myanmar's Transition: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DPRK •Vietnam's Economic Transition Well Begun, Not Yet Done
2014년 봄호 (통권 제40호)	◈ 기획논단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유라시아 시대의 동북아 협력과 북한 개발 전망 - 교통 · 물류를 중심으로- •북한 개발 촉진 방안 - 국제 NGO 및 국제기구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2014년 여름호 (통권 제41호)	◈ 기획논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입장과 한중 협력 방향 •북한 인력 경제교육을 위한 KSP등 개발협력 패키지 활용방안 ◈ 특별논단 •Eastern Europe Cross-Borde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Lesson for the Korean peninsula •Construction of Northeast Asia's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Task of Promoting Trade •From state Monopoly in Foregin Trade to Intergration into world Economy: Financial Implications of German Unification

통 권	제 목
2014년 가을호 (통권 제42호)	◈ 기획논단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선 동향 - 평가와 전망 •남북교류, Track II는 없는가? •남북러·남북중 삼각협력을 통한 대북경협 활성화 방안
2014년 겨울호 (통권 제43호)	◈ 기획논단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현황과 시사점 •동북아개발은행 구상과 추진 전략 •2000년 이후 북한 시장의 변화 - 소비재부문을 중심으로
2015년 봄호 (통권 제44호)	◈ 기획논단 •해방 이후 북한 경제체제와 경제실적 종합평가 •북한의 식량수급 변천과 2015년 전망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석(1945~2014)
2015년 여름호 (통권 제45호)	◈ 기획논단 •동북아 개발과 금융협력 : 다자개발은행(MDB) 활용방안 •개성공단과 한중 FTA 역외가공 연계가능성 모색 •러시아 극동에서 남 · 북 · 러 3각 농업협력 방안
2015년 가을호 (통권 제46호)	◈ 기획논단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러협력 방안 •동북아 국가 지역발전 전략의 지정학적 함의
2015년 겨울호 (통권 제47호)	◈ 기획논단 •남북관계 평가 및 전망 •북한의 대중 수출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쟁점과 과제
2016년 봄호 (통권 제48호)	◈ 기획논단 •유엔의 스마트제재와 북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한국의 대북제재: 분석과 시사점

통 권	제 목
2016년 여름호 (통권 제49호)	◈ 기획논단 •북한의 경제변화와 전망 •북한 지방경제개발구 개발 주체로서의 지방 정부의 역할과 한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6년 가을호 (통권 제50호)	◈ 기획논단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통치전략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핵정책과 한반도 위기구조 전망 •북·중 경제관계 현황 및 향후 남·북·중 협력에 대한 시사점
2016년 겨울호 (통권 제51호)	◈ 기획논단 •대북제재가 북·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북한 외자 유치 정책의 변화 요인과 시사점 •이론으로 본 김정은 정권의 지속 요인
2017년 봄호 (통권 제52호)	◈ 기획논단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 대립과 반기득권의 정치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일관계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미·러 관계 변화와 한반도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2017년 여름호 (통권 제53호)	◈ 기획논단 •남북경협의 평가와 전망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김정은 시대 북한의 화폐·금융 정책과 기대효과: 카드 사용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재개시 금융결제방안 연구
2017년 가을호 (통권 제54호)	◈ 기획논단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과제 •중국 핵무기 전력의 개발과 운용: 대미관계의 관점 •북·중 무역과 대북제재의 한계

통 권	제 목
2017년 겨울호 (통권 제55호)	◈ 기획논단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 2017년 평가와 2018년 전망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의 국산화추진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북한개발협력
2018년 봄호 (통권 제56호)	◈ 기획논단 •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과 대응방향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경협 과제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서 본 북한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2018년 여름호 (통권 제57호)	◈ 기획논단 •2018년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김정은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새 전략노선과 남북경협 방향 •남북 사회문화교류 전망과 과제 ◈ 특별논단 •남북 어휘 통합과 《겨레말큰사전》
2018년 가을호 (통권 제58호)	◈ 기획논단 •북한의 관광 산업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국제협력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소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항만 배후권역 활용방안 ◈ 특별논단 •EBRD 기관 소개 •ADB 기관 소개
2018년 겨울호 (통권 제59호)	◈ 기획논단 •북한 경제 2018년 : 자력갱생과 과학기술 •체제전환국에 대한 개발협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한 농업협력 방안 ◈ 특별논단 •대한적십자사와 남북 이산가족교류사업

통 권	제 목
2019년 봄호 (통권 제60호)	◈ **기획논단** •개성공단 사업 평가와 향후 과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와 출입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검토 •북한 도시개발의 새로운 방향 모색 ◈ **특별논단** •남북경협합의서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북한의 조세불복제도 및 향후 과제
2019년 여름호 (통권 제61호)	◈ **기획논단** •북한개발협력과 SDGs: 북한 · UN 전략계획의 의미 •북한의 개발재원조달 방안 모색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 연구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특별논단** •정상외교 시대의 한반도 정세
2019년 가을호 (통권 제62호)	◈ **기획논단** •북한개발협력과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김정은 정권의 하이브리드체제 지향 가능성 연구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원고를 환영합니다.

「수은 북한경제」는 남북교류협력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다른 곳에서 게제되지 않았거나 게재될 예정이 아닌 새로운 내용의 원고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수은북한경제」 담당자
- 02-6255-5207
- sungjin.kim@koreaexim.go.kr

수 은 북 한 경 제

〈제16권 제4호〉

〈통권 제63호〉

등 록 일 자	2004년 6월 10일(등록번호 : 영등포 바 00040)
발 행 일 자	2019년 12월 31일
발 행 인	방 문 규
편 집 인	박 유 환
발 행 처	한 국 수 출 입 은 행 (북 한 동 북 아 연 구 센 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본지에서의 출처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